光州日報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0426호 1판 (음력 1월 7일) 2017년 2월 3일 금요일

“손님 없소?” 굴비의 비명 지난 1일 영광 법성포 굴비거리에서 한 상인이 굴비를 진열하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 후 첫 명절이었던 지난 설 대목에 법성포 굴비는 지난해보다 35%가량 덜 팔려 이곳 상인들이 한숨을 쉬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칠산바다엔 참조기 씨가 마르고 … 설 선물세트 판매량 35% 줄고

“김영란법 유탄 법성포가 다 맞았어”

찬바람 ‘쌩쌩’ 굴비거리 르포

옛 영광 사라진 영광 문 닫는 가게 속출
굴비산업 활성화 대책 시급 영광군, 올해 115억 지원

진눈깨비가 흩날리던 지난 1일 영광 법성포 굴비거리. 돈이 되는 참조기를 가득 실은 ‘돈 배’가 드나들어 강아지도 돈을 물고 다닌다던 굴비거리에는 정적만이 옛 영화를 대신하고 있었다.

설 대목 장사가 끝난 탓도 있지만 최근 굴비거리는 활기를 잃었다. 굴비로 만들어지는 참조기 어획량이 크게 줄어 값이 치솟고,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으로 굴비 선물을 찾는 소비자도 줄었기 때문이다.

이날 “사람은 없어도 한 푼이라도 벌어야 한다”며 가게 문을 열었다는 김모(여·59)씨는 “굴비값이 올라 찾는 사람도 줄었는데 김영란법 때문에 올 설 장사를 망쳤다”고 하소연했다. 그래서인지, 바닷바람이 잘 들도록 굴비를 엮은 줄을 뒤집어 걸던 김씨의 손 마디는 마른 굴비처럼 앙상했다.

이곳 상인들은 “김영란법 유탄은 영광이 다 맞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영란법 시행 후 첫 명절이었던 지난 설 굴비 매출이 급감했다는 것이다.

실제, 영광군에 따르면 이번 설 굴비 선물세트의 판매량(택배 물량 기준)은 5075t, 판매금액은 780억원에 그쳐 지난 2016년 설에 비해 판매량은 35% 줄었고 판매금액은 420억원 감소했다.

참조기 어획량 감소 탓도 있지만 김영란법 시행 전이었던 지난해 판매량과 비교해 보면, 김영란법의 피해는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지난해 굴비거리에서는 1만9520t(판매액 3000억원)의 굴비가 팔려 지난 2015년(1만7600t·3500억원)에 비해 판매금액이 14% 감소하는데 그쳤는데 김영란법 시행 이후 맞은 올 설 연휴에는 배 이상 판매량이 줄었다. 특히 굴비거리 가게 중 김영란법에 따라 5만원 이상의 선물은 금지된 기관을 대상으로 거래하던 곳의 피해가 컸다. 영광군의 조사결과 이들 업체들의 올 설 매출은 지난해에 비해 5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상인들 사이에서는 “외지 손님을 위해 굴비를 선물로 사던 영광군 공무원들도 이제는 굴비를 사지 않는다”는 말이 나돌 정도였다.

매출이 크게 줄어 굴비거리 곳곳에는 문을 닫는 가게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 2014년 496곳이었던 굴비 가게가 지난해 465개로 31곳(6%) 이 줄었다.

또 피해는 영세 상인이 먼저 입고 있다. 올 설 중·대형 업체는 25~30% 매출이 줄어든 반면, 소규모 가게는 30~40%가량 매출이 감소했다.

물 반 고기 반이었던 칠산바다에 참조기가 사라지고 있는 것도 매출 감소의 큰 원인이다.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2016년 11월 기준 연근해 누적어획량’을 살펴보면 지난해 참조기는 4122t이 잡혀 지난 2015년에 비해 어획량은 43% 감소했다. 값은 치솟아 15kg에 15만원하던 참조기는 현재 34만원을 주고도 구하기 힘들어졌다. 이 때문에 중국산 부서를 들여와 굴비 대신 파는 가게도 생겨나고 있다.

이에 상인들은 굴비거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참조기 양식을 통해 가격을 낮추고, 한시적으로라도 김영란법 예외 품목으로 농수산물을 포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영광군은 올해 115억원을 투입해 굴비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영광군은 어족 자원을 늘리기 위해 지역 넙치 양식장 4곳을 참조기·부세 양식장으로 전환하고, 참조기 종묘 30만 마리를 사들여 안마도 근해에 방류한다.

또 김영란법상 제한된 선물 가격인 5만원 미만에 맞춘 소포장재 지원, 냉동·냉장고 확충에 나선다. 또 노후 가공시설 현대화 등을 위해 수산물 가공시설 9곳을 지원한다.

/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영광=이종윤기자 jylee@kwangju.co.kr

정병석 신임 전남대 총장 인터뷰 ▶5면

완도출신 ‘국민 변호사’ 박준영 “세상을 바꾸는 힘은 연대” ▶22면

민주당·국민의당 ‘연립정부론’ 충돌

우상호 원내대표 제안…박지원 대표 “우리 당 소멸시키려는 의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일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힘을 합쳤을 때 정권교체가 확실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라며 “정당 통합이 어렵다면 적당한 시점에 공동정부 구성을 위한 연립정부 협상이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4면〉

하지만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당을 소멸시키려는 정치공학적 제안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선을 긋고 “연립정부는 결선투표제 도입을 통해 구성할 수 있고 대선 이후에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완성하지 못한 원대한 꿈의 실현을 위해 서로 마음을 열자고 호소하는 것이며 패권주의가 문제라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대선 전 개헌이 어렵더라도 개헌특위 논의는 더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며 “각 당의 이견을 좁혀서 적어도 다음 지방선거 때에는 국민투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18세 선거 연령은 대선 전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공정하고 조속한 결정이 필요하며, 여야 모두 승복해야 한다”며 “헌재 결정이 2월 말 3월 초에 내려진다면 차기 대선을 4월 말에 치르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과 조기 대선 국면에서는 주변국과의 주요 갈등 이슈를 관리 모드로 전환해야 한다”며 한일 위안부 합의·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계획) 배치 문제 등을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개혁 과제로 국정교과서 금지법, 세월호 특조위 2기 구성, 백남기 농민 특검 도입,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 구제책 조속 마련, 5·18 특별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 푸짐한 음식문화 탓?
1인당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전국 1위

광주 하루 평균 500t 넘어서

광주시의 1인당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7개 특·광역시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발생량도 500t을 넘어섰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2015년 음식물 쓰레기 1일 평균 발생량은 536톤으로, 2014년 499t과 비교해 37톤(7.4%) 증가했다. 1일 발생량이 500톤을 넘은 것은 1986년 광역시 승격 이후 처음이다.

1인당 발생량은 334g으로, 서울시와 부산, 대전 등 특·광역시 평균 277g보다 57g(17.1%)이나 많았다. 전남이나 전북 등 광역도(道)는 대도시인 특별·광역시보다 발생량이 현저히 적다.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많은 것은 남도의 푸짐한 음식문화가 가장 큰 요인이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발생량이 공공시설의 쓰레기 처리시설 한계를 넘어섰다는 데 있다. 유덕과 송대 등 2곳의 음식물 처리시설의 능력은 450t이다. 하루 평균 80t 이상을 민간업체에 맡겨 해결한다는 의미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만 연간 261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오는 2020년까지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30% 줄이기에 나서기로 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